

전남 굴 양식 어가 숨통 트인다…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법무부, 전남도 요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착 확대 정책건의 수용
굴 육상 가공 외국인 근로자 허용…지역특화비자 취득 기준 완화도

전남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산업계와 어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변경돼 굴 해상 채취 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해의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어업 분야 허용 업종으로 김 가공(육상) 및 생산, 해조류 종자 양식과 해상채취, 멸치·가자미 가공 등만 허용했다. 굴의 경우에는 육상 가공 업종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전남도는 지난 10년간 전국 굴 생산량이 30만t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전남의 경우 굴 생산량이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4년 30만t 이었던 전국 굴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24년 33만t으로 3t이 증가했지만, 전남의 경우 2014년 2만8000t에서 2024년 6만3000t으로 2.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굴 재배 어가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전남지역 굴 양식 어가에서는 일손 부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는데, 전남도는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굴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상·채취 등)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업종 확대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건을 제출했고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남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혔다. 또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안에 이르러 올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일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496만원 이상이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또한 지난 6월 전남도가 법무부와 의 간담회 이후 지속 건의한 결과물이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할 수 있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 비자로서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으나, 그동안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조정으로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실증밸리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남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힘 모은다

내일 국회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럼이 9일 국회에서 열린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이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신정훈, 서미화,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록 전남도지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다.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서남권 바이오헬스

스복합단지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 패널로는 최중일 조선대학교 교수, 정진 전남대학교병원장, 이재중 박셀바이오 대표, 김한속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을 논의한다.

특히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법령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

합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화산 백신 산업특구를 기반으로 백신·면역치료 분야의 의약품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다.

시도는 특화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의료기기-의약품 연계 제품 개발과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공유 등으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저비용·강소형 바이오헬스복합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록 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 시장, 광주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이한주 국정위원장 등 면담…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등 건의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려고 총력을 펼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방부, 국회 등을 오가며 광주 핵심 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강 시장은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면담하고 광주 14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가 전달한 국가균형성장전략 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공항 조성, 동서 철도망(달빛철도) 신속 구축, 수도권 정부·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다.

광주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AI 기반 미래차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 국가 주도 5·18 사적지 보존 활용 등이다. 광역 MVDC 기술개발 및 전력망 구축

사업,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 조성, 국립 문화시설 유치·조성, 국가AI혁신연구원 설립 및 AX조각차 융합인재 양성사업 등도 현안이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 앞서 국방부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광주 민·군 공학 통합이전을 위한 정부 전담팀(TF)'을 서둘러 구성해 통합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항 소음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 공항공사와 협의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우는 검증 조사도 요구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전공약 서울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 광주발전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최초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 기대

광주시가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시민이 겪는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

정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함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과 연계해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중위소득 75% 이하 시민이다.

지원금은 채무조정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5만원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금융회복의 출발점에서 생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시민이 채무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광주시정 민원실 내 개소한 이후 1만6000여건의 채무조정, 서민 대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